‘비명 주자 단일화 약속’ 수면위로

강병원 제안에 ‘동상이몽’
박용진 “OK” 강훈식 “시기상조”
이재명측 “비전경쟁 않고 한심”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재선의원 모임 주최 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후보자인 박주민, 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의원과 참석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이 본격화 하면서 단일화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상임고문의 강세 속에서 예비경선(컷오프) 이후 본선에서 단일화하기로 미리 약속해두자는 공식 제안이 나오면서 ‘8·28 전당대회’ 판이 술렁이고 있다.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주자인 강병원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 고문을 제외한 7명 후보끼리 ‘본선 단일화 공동선언’을 하자고 했다.

그는 “누가 본선에 진출해도 1명의 후보로 단일화하고 단일 후보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 고문을 일찌감치 ‘공공의 적’으로 못 박고 세(勢)를 규합하자는 것으로, 반명(反明) 전선을 선명하게 형성해 ‘이재명 대세론’을 흔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컷오프를 일주일 앞두고 나온 ‘사전 결의’ 제안에 나머지 후보들은 동상이몽 분위기다.

단일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강도’는 물론 단일화 ‘시점’을 두고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당장 97그룹 주자 4인방(강병원·강훈식·박주민·박용진) 내부에서조차 온도 차가 여실히 드러났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재선의원 모임 주최 토론회에서 “단일화가 논의되려면 가치나 당의 혁신 방향 등에 있어서 접점이 있어야 한다”며 ‘비이재명 단일화’에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강훈식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별한 제안은 아닌 것 같다. 지금은 후보들의 비전을 이야기할 시간”이라며 “단일화 시점은 컷오프 이후가 돼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86그룹 대표 주자인 김민석 의원도 “제안의 구체적 내용부터 확인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반면 박용진 의원은 “저도 (강병원 의원과) 똑같은 생각이다. 지금부터 스크럼을 짜자”며 “이재명 고문은 우리 당의 혁신 주체가 아니라 쇄신 대상”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낙연계 주자인 설훈 의원도 통화에서 “이재명을 제외한 후보들끼리 컷오프 전에라도 단일화 약속을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자들 간 이견에 ‘단일화 약속’ 공동선언은 사실상 현실화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이재명계 일각에서는 단일화 논의 물꼬를 빨리 틔운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본선도 아니고 컷오프 전부터 단일화를 약속하자는 것은 애당초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강병원 의원도 몰랐을 리 없다”며 “다만 이재명 대 반이재명이라는 대립 구도를 더 뚜렷하게 해서 표를 결집하는 효과는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고문 측은 공식 대응은 삼갔지만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는 못했다.

이재명계 인사는 통화에서 “대선도 지방선거도 아니고 당내 선거에서 후보를 단일화하자는 건 20년 넘게 정치하면서 본 적이 없다”며 “행태가 참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머지 주자들 각자 지지기반이 다 다르다”며 “그들끼리 단일화 해봐야 각자 지지율이 다 플러스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고문 측 핵심 관계자도 “차기 당 대표가 되겠다는 분들이 비전 경쟁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정치공학적 궁리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도정학습 열기’ 뜨거운 전남도의회 임시회

현안 질의 날카롭고 꼼꼼하게
상임위 6~7시 넘도록 진행돼

전남도의회가 개원 이후 첫 임시회를 맞아 ‘도정학습 열기’로 뜨겁다. 첫 임시회 기간 진행중인 업무보고 과정에서 현안에 대한 꼼꼼한 질의로 각 상임위원회가 오후 6~7시 넘도록 진행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초선 의원들에게 도의회 자치법규를 제작, 배포했고 일부 의원들의 경우 상임위원회 소관 실·국, 산하기관 업무보고 자료뿐 아니라 지방의회 운영 편람 등을 미리 살펴보고 까다로운 현안을 짚어내기도 해 집행부를 당혹하게 했다.

김성일(민주·해남 1) 의원은 지난 20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열린 전남동부지역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과정에서 서은수 본부장을 향해 “전남도 일선 시·군에서 보조금까지 지급하며 전기 이륜차 공급에 앞장서면서 정작 이륜차 충전시설이 전무한 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6월 말 기준 전남에 보급된 전기이륜차는 2633대로, 전남지역의 경우 가정용 충전시설 외 전기차 충전소같은 외부 충전공간은 전무하다.

환경산업진흥원의 인력 부재도 지적됐다. 김 의원은 박응렬 원장을 상대로 한 질의 과정에서 원장·사무국장을 포함한 간부진 중 두 자리가 비어있는 현실을 짚었다. 박 원장은 “부임한 지 2년 3개월 째인데, 한 자리는 애초부터 공석이었고 나머지 한 자리도 도중에 나가 여러 차례 공모를 했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내부 승진을 통해 채우려다 보니 승진 기한까지 남아있는데다, 적임자도 찾지 못하면서 경영기획·기술평가·연구개발·기업지원부 등 4개 부서 중 2개 부서장 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과 최선국(민주·목포 1) 보건복지환경위원장은 “일이 제대로 되겠냐. 다른 직원들이 잘 대체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적극적으로 해결해라”고 지적했다.

김미경(정의·비례) 의원은 김병성 식품의약과장을 상대로 입식 테이블 확대 정책을 언급하면서 장애인 배려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초선 의원인 김 의원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던 좌식 테이블을 갖춘 음식점의 경우 입식 테이블로만 확대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다보니 정작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문턱이 높아 아예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책적 관심을 주문했다.

박원종 의원(민주·영광 1)은 21일 진행된 기획조정실에 대한 업무보고 중 “지난해 전남 16개 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면서 전남도의 41개 2차 희망 공공기관에 대한 적극적 유치 노력을 당부했다.

전남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도 의원들의 현안 질의가 많아 20일에는 오후 7시 넘도록 상임위원회가 진행됐다.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은 “개원 이후 전남도정 현안에 대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주철현 “사육허가 맹견도 사람공격하면 안락사”

최근 잇따라 인명사고를 나고 있는 ‘개물림’에 대한 안락사 과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 국회의원에 따르면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개가 사람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심지어 사망케 한 경우에도 사고를 일으킨 개에 대한 처분 규정이 전무한 수준이다.

‘동물보호법’ 제13조의2는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맹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10일 이내(10일 연장 가능)의 격리조치일뿐이고, 격리기간이 지나면 소유자에게 반환토록 하고 있다.

특히 이 규정은 사고견이 도사견, 로트와일러 등 ‘법정 맹견’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작년 5월 남양주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나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8살 아이의 개물림 사고처럼, 법정 맹견이 아닌 경우에는 이마저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은 기질평가를 거쳐야 사육허가를 받을 수 있고,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사육허가를 거부하고 심의를 거쳐 안락사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미 사육허가를 받은 맹견도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한 경우에는 사육허가를 철회하고 심의를 거쳐 안락사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 사각지대에 있던 ‘맹견이 아닌 개’의 경우에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개별 지정한 후 사육허가와 안락사 등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회재 “박순애 음주운전 선고유예 이례적”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음주운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던 해인 2002년 전체 음주운전 판결 인원 중 선고유예는 0.78%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례와 비교해도 박순애 부총리의 선고유예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여수을) 국회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2년도 음주운전 판결 현황’에 따르면 2002년 전체 음주운전 제1심판결 인원은 1만 811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선고유예를 받은 인원은 단 84명으로 전체의 0.78%뿐이었다. 당시 박순애 부총리가 받은 선고유예 판결은 0.78%의 매우 특이한 케이스였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재판 전에 음주운전 특사(특별사면)가 있었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박 부총리의 해명이 설득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0.78%의 특이 케이스들 중에서도 박 부총리의 선고유예 판결은 다른 사례 대비 이례적이었다.

김회재 의원실이 박 부총리의 선고가 이뤄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02년도 음주운전 선고유예 판결 9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음주운전자 중 혈중알콜농도가 0.2%가 넘는 건 오직 박 부총리 뿐이었다. 선고유예를 받은 다른 음주운전자들은 상대적으로 정도가 경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 부총리의 판결문에는 선고유예 판결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오광록 기자 kroh@

서삼석, 농약관리법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21일 유해성이 우려되는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절차를 의무화 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메틸브로마이드를 비롯한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농약의 사용 제한 및 재등록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농약 안전성 검증은 정부가 고시한 품목을 제조 및 수입 업체가 등록하는 고시제에서 1997년부터 등록제로 전환됐다. 정부가 검증하던 분석 성적서 및 약효·독성·동식물 영향 시험 성적서(이하 시험성적서)를 업체가 제출하도록 했다.

고시제 시행 때 등록된 농약 727건을 분석한 결과 농촌진흥청은 모두 최초 제출한 시험 성적서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으며 국가기록원에도 조회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약 유해성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를 재등록 심사에 반영해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부분이다.

서 의원은 “과거의 기준으로 검증한 농약이 현재에도 인체 및 동식물에 대한 유해성 기준이 같을지 의문이다”며 “메틸브로마이드가 최초 등록된 1981년 이후 1989년에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규제 물질로 규정된 사례처럼, 향후 변경되는 기준에 따른 점검이 필요하지만, 농촌진흥청은 최초 등록·신고 당시 시험 성적서를 확인하지 못해 유해성 검증도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